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자 인큐베이팅 사업
- 기관명: 사회과학연구원
- 연구기간: 2020년 3월 - 2021년 1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인큐베이팅 사업의 단계적 발전 과정)

- **연구개발 단계(2018년 2학기):** 본 연구 사업은 2018년도에 6개월 동안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음. 교내의 10인의 연구자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자의 연구주제를 정하고 전체 연구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연구개발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북한의 사회문화에 관한 (비교)연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2018년 4분기에 예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어젠더에 동의하고 내부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자들이 2019년 2월까지 북한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연계된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2019 통일기반구축사업 참여(2019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9명의 교내 연구진이 정치, 인류, 경제, 문학, 종교, 법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이미 게재하거나 향후 출판을 목표로 논문초고를 완성하여 2019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음.
 - 2018년도에 제출된 개별 연구자의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된 2019년 사업의 기본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한

개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2019년도에 각자가 시도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개별 연구자가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 혹은 단독으로 외부의 학술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이 과정에서 개별 학문분야로 흩어져 있던 연구역량이 북한의 사회문화의 탐구를 위해 모이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 그 결과 2019년도에 정치, 인류, 경제, 문학, 종교, 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이미 게재하거나 향후 출판을 목표로 논문초고를 완성하여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한 바 있음.
- 개별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이 기존 통일-평화 연구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과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호평을 받았음. 이에 고무되어 2019 연구자 중에 사회문화 분야에 보다 특화된 학자를 중심으로 향후 각자의 문제의식을 외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게 되었음.

- 2020 통일기반구축사업 참여(2020년):

- 이번년도 인큐베이팅 사업은 2019년 연구자 중 사회문화 분야에 보다 특화된 학자를 중심으로 향후 각자의 문제의식을 외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계획함.
- 이는 인큐베이터 사업이 예비단계(1단계)와 연구논문 작성 단계(2단계)를 거쳐 공동/개별 연구가 가능한 연구프로젝트로의 발전을 완성하는 단계(3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함.
- 이번 3단계를 실행함으로써 인큐베이팅 사업의 기본 목표인 통일-평화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교내만이 아니라 외부로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향후 개별연구를 소규모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음.

○ 목적

- 학내 평화-통일 연구자의 저변 확산: 본 연구사업의 주요 목적은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자의 저변을 확산하는 것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에서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에게 북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통일평화 연구의 저변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 내에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다수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자의 역량을 북한 사회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는데 활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그 결과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통일학과 평화학 분야의 저변이 기대만큼 빠르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일부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의 조망이 필요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학문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 이를 위하여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관된 주제나 유사한 상황을 가진 타 지역의 사례를 다루어온 서울대학교 내 연구자에게 북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의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내외 통일과 평화와 관련한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 탐색: 본 연구사업은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차적 목표로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를 면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고자 함.
-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삼은 연구 분야에서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나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북한 주민의 사회적 삶과 문화적인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매우 단편적인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사업은 그 동안 자신의 전공이나 연구지역에서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동학을 형성시켜 온 조건, 과정, 그리고 이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본교의 전문 연구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북한에 적용시켜 연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추진 내용

- 이 사업은 사회문화 부문의 법, 심리, 권력 문제와 베트남, 중국 등 다른 지역의 개혁개방과정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가 함께 모여 북한연구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음.
- 첫째,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조응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자와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음. 매번 1시간 정도의 발표를 듣고 북한사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답을 듣는 토론시간을 가졌음.
- 둘째, 연구진이 소규모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자주 회동하여 각자의 관심사의 진척사항을 논의하고 이 가운데 2회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 셋째, 세미나를 토대로 파악된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층적 논의를 전개하였음.
- 이상의 세 가지 활동을 토대로 향후 단독 혹은 공동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음.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0.06.02.	통일기반구축사업 책임자 회의
2020.06.03.	연구진 회의
2020.07.17.	중간 점검 회의
2020.09.01.	중간 점검 회의
2020.10.20.	탈북민초청간담회1(김현미)
2020.11.10.	탈북민초청간담회2(엄덕봉)
2020.11.24.	탈북민초청간담회3(엄덕봉)
2020.11.26.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
2021.01.06.	탈북민초청간담회4(김주성)
2021.01.14.	탈북민초청간담회5(류현우)
2021.01.22.	탈북민초청간담회6(전경주)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채수홍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사회과학연구원	6426		cha4811@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김재석	인류학과	부교수	jaesokk@snu.ac.kr
정공식	법학과	교수	gsjung@snu.ac.kr
정향진	인류학과	교수	hjjung@snu.ac.kr

3. 사업 성과

□ 연구결과물

○ 논문, 저널 및 단행본 챗터

- 정향진. 2020.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149-178
- 채수홍. 2020. “제3장 베트남의 산업화와 노동자의 저항” 문화인류학자가 들려주는 동남아시아 이야기. 눌민출판사. p.139-191.
- 정향진. (2020.11.30.) “Family Metaphors in Religion: Cas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Religion.
<https://american-religion.org/askewjung>
- 김재석. 2021. “From Coercion to Cooperation: Urban Governance and Evolving Modes of Control in a Beijing Village” Critique of Anthropology. (2021년 6월 출판예정)

○ 학술대회 및 세미나

- 2020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0.11.26.)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0.10.20.) 탈북민 김현미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0.11.10.) 탈북민 엄덕봉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0.11.24.) 탈북민 엄덕봉 (추가적으로 진행)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1.01.06.) 탈북민 김주성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1.01.14.) 탈북민 류현우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1.01.22.) 탈북민 전경주

공동연구원의 개별 연구주제 (가나다 순)

○ 본 연구 사업에 참여한 개별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음.

연구자	연구주제
김재석 (인류학과)	동원과 처벌, 감시와 자율: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 노동력 관리 전략 비교연구
정공식 (법학과)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 헌법 개정
정향진 (인류학과)	선전선동을 통해 보는 북한체제의 문화심리적 토대와 변화의 징후
채수홍 (인류학과)	개혁개방이후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치에 대한 북한에의 시사점

공동연구원의 개별 결과보고 (자유양식)

1) 김재석 (서울대 인류학과)

동원과 처벌, 감시와 자율: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 노동력 관리 전략 비교연구

2020년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자는 포스트사회주의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또는 인구 관리 전략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에는 그 첫 단계 연구인 중국의 사례를 연구·정리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하였다.¹⁾

1) Jaesok Kim. 2021. "From Coercion to Cooperation: Urban Governance and Evolving Modes of Control in a Beijing Village." *Critique of Anthropology* (forthcoming, June 2021).

학술논문을 작성·출판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진행해 온 현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에 바탕하여,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의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이 거버넌스가 끊임없이 전화(轉化)하는 맥락에서 중국의 노동력·인구 관리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레닌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강제적 동원과 엄격한 처벌, 그리고 엘리트에 의한 사상 주입 방식에 기초했다면, 포스트사회주의 시기의 중국 정부는 첨단 기술에 바탕한 일망 감시망(Panoptic surveillance)의 구축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기반한 사회신용체제(社会信用体制) 구축을 통한 합리적·자율적 노동주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이전 연구(김재석 2019)에서 주장했듯이, 북한 정부가 중국을 자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 있어 긴밀하게 참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정부가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적 요인과 시장-합리적 행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기의 감시와 통제, 연좌제와 같은 처벌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동력 관리에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와 관련된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인구 관리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략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합리적·자율적 노동주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통치전략과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현재 중국에서 자기규율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관리와 통제의 기제는 개혁·개방 시기 이후 중국 정부가 서구의 “근대적” 통치 기술과 전략을 받아들인 데에 크게 의존한다(Lemke 2002). 하지만 현대 중국의 노동력 또는 인구 관리 거버넌스는 자아 혹은 자기 규율의 기술(Foucault 1993: 203-204)과 자율적 규제에 대한 보상(報償)의 원칙을 내재한 주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통치전략이, 사회주의 시기의 직접 감시와 처벌의 위협 그리고 집단적 동원의 수단이 지닌 강제적 통제의 전략과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Greenhalph and Winckler 2005: 134; Rose 1999: 50).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폐쇄회로 카메라를 포함하는 각종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감시의 사각(死角)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을 기존 사회주의 시기 대규모 동원에 바탕한 실시간 감시체제와 결합한 사실을 주목할만하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치안이 안정된 도시(平安城市) 건설을 목표로 텐왕공정(天网工程, Skynet project)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사회주의 시기 감시기제를 특징짓는 격자망 감시(grid surveillance)체제는 고해상도 CCTV와 안면인식 기술과 같은 최첨단 감시기술과 결합되어 고도의 일망감시(Panoptic surveillance)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CCTV는 피사체를 녹화하는 기술로 머무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베이징 시 당국은 2,000여명의 공안(公安)요원을 CCTV의 피사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동원하여, 어느 경우에도 피의자를 30분 이내에 검거하는 고도로 효율적이며 억압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노동력·인구 관리방식은 단순히 외부적 감시와 처벌의 기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는 2020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회신용체제(社会信用体制)의 형성과정에서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인구 관리전략의 혼종성과 연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방 정부와 알리바바(阿里巴巴)와 같은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실험해 온 사회신용체제의 전신(全身)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 체제가 목표로 하는 “믿을 만한” 개인이나 단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명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텡신(腾讯)과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 그리고 SNS를 통해 “믿을 만한” 개인과 “믿지 못할” 개인의 구분이 나타나고, 이러한 차별적 고객관리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인-자기규율을 내재화한-개인 주체성(subjectivity)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은 사용자들의 구매내역이나 온라인 소셜활동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신용도를 차별화하고, 높은 신용도의 개인에게 구매할인이나 해외여행에서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즉 어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무거운 처벌의 기제 없이도,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개인은 자기규율을 내면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영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해당 기업의 관리대상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사영기업의 수집·관리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세금납부나 법규위반여부와 같은 다른 공적 영역의 데이터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서버에 통합되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확보·분석하여 전 국민에게 신용점수에 따라 차별적인 혜택과 불이익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특히 공공질서 준수나 세금의 정시납부와 같은 공적 영역의 자료들이 개인적 상품구매와 소셜미디어 활동과 같은 사적 영역의 자료들과 결합되어 “믿지 못할” 개인들의 정보가 취합된 블랙리스트를 구성하게 되었다.

결국, 안면인식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응용하여 구성되는 격자형 감시체제가 시장-합리적 자율적 주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신용체제와 맞물리며 형성하는 통치의 기술은,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통치성을 특징짓는 혼종과 연속의 특징을 드러낸다. 연구자는 중국 인민들이 이러한 “중국적 통치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통해 조명하였고, 특히 이들의 반응이 즉각적 저항이나 소극적 회피의 태도보다 긍정적 추인과 자발적 참여의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인구 관리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의 경우에 대한 비교연구를 구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사회주의 시기 북한의 노동력 관리전략은 강력한 수령의 자의적 영도와 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상화를 통해 집단적 동원과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 내는 레닌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조달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배급제가 붕괴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심각한 기근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특히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식량을 확보하려는 자구(自救)적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북한의 민간차원에서 시장-합리성을 지닌 주체성이 사회주의적 주체성에 우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연구자는 특히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참여행위가 사회주의 체제 외(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행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영역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체제 내(內)의 노동력 유출과 낭비로 간주되고, 정부와 당의 간헐적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노동력 · 인구 관리전략 및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경제 영역으로의 노동력 유출에 대한 북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관련 정책과 사상교육과 같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당 정책의 변화가 민간(民間)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어떠한 반응을 불러오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2) 정공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 헌법 개정

I. 연구목적

1. 북한 체제의 최고규범

- 북한을 이끌어가는 두 규범은 ‘노동당규약’과 ‘헌법’이다.
- 노동당 일당독재를 지향하는 북한에서 이념과 정책방향은 ‘노동당규약’에 표현됨
- 법형식적으로는 ‘노동당규약’은 노동당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 노동당 당원 외의 인민들은 헌법이 최고규범이다.

2. 북한 체제에서 헌법의 의의

- 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함
- 북한에서는 정치적 변혁기에 헌법 개정으로 정치제도와 통치방향을 규정함
- 헌법 제정 및 개정의 취지는 헌법 前文[서문]에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문의 분석은 당시 북한 정치 및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헌법 개정의 관계를 고찰하여 북한 체제의 지향점을 분석한다.

3. 연구계획의 변경

- 1948년 정권수립 후 전후복구기의 법제 정리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였다.
- 법제 전체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북한체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계획을 수정하였다.
-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입법의 전체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

II. 연구 진행 상황

1. 북한 노동당 규약 등

- 노동당이 결성될 때까지의 다음 문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수집하였다.
 - = 20개조 정강(1946. 3.23)
 - = 정부의 정강(1948. 9. 10)
 - = 인민회의의 선언서(미상)
 - = 조선노동당 강령(1948. 8. 29)
- 위 문건의 분석으로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체제와 이념을 분석함
- 체제의 요구와 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노동당 규약이 개정되었으며, 당의 성격도 변하였다.
- 조선노동당 규약의 변화
 - = 1946. 8. 30(제정) 및 1956년 및 1961년: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
 - = 1970년: 노동계급과 노동대중의 선봉적 조직부대이며 우리나라 노동대중의 모든 조직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
 - = 1980. 10. 13: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
 - = 2010. 9. 28: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 = 2012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
- 규약은 근로대중의 정당에서 김일성 개인의 정당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헌법, 주체사상의 확립, 김정일체제의 수립 등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북한 헌법의 변천

- 1948년 9월 8일 제정 이후 2019년까지 15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중요한 계기임, 헌법 전문 조사 및 수집

- 1948년 9월 8일 제정 이후 변천
 - = 제1차 개정 1954년 4월 23일: 행정구역 및 내각구성 조항의 일부 개정
 - = 제2차 개정 1954년 10월 30일: 각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 = 제3차 개정 1955년 3월 11일: 제2차 헌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권기관의 권한 변경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조항 및 내각구성조항 등 개정
 - = 제4차 개정 1956년 11월 7일: 선거권, 피선거권의 연령 18세 개정.
 - = 제5차 개정 1962년 10월 18일: 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규정 중심 개정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후 변천
 - = 제6차 개정 주체 61년(1972) 12월 27일: 전문개정
 - * 사회주의 헌법에 대하여(12월 28일): 서문에 해당
 - = 제7차 개정 주체 81년(1992) 4월 9일: 수정보충
 - = 제8차 개정 주체 87년(1998) 9월 5일: 수정보충, 서문
 - = 제9차 개정 주체 98년(2009) 4월 9일: 수정보충
 - = 제10차 개정 주체 99년(2010) 4월 9일: 수정보충
 - = 제11차 개정 주체 101년(2012) 4월 13일: 수정보충, 서문
 - = 제12차 개정 주체 102년(2013) 4월 1일: 수정보충, 서문
 - = 제13차 개정 주체 105년(2016) 6월 29일: 수정보충, 서문
 - = 제14차 개정 주체 108년(2019) 4월 11일: 수정보충
 - = 제15차 개정 주체 108년(2019) 8월 29일: 수정보충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후 전문개정은 없지만, 서문 등을 추가하여 정치적 변화를 헌법에 구용하였다.

- 북한 헌법의 체재[구성] 변화
 - = 1948년 헌법: 제1장 근본원칙, 제2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7장 국가예산, 제8장 민족보위,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 = 1972년 헌법: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8장 정무원,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 = 2016년 헌법: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

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3절 국무위원회,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5절 내각,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8절 재판소 및 검찰소),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참고 대한민국헌법(1987):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 헌법 개정의 이유와 배경 등은 서문에서 분석한다.
- 국가기구, 국가상징 등 대상으로 하여 북한 헌법의 특징을 분석한다.
- 개별조문의 변천보다는 전체 구조에 집중한 연구를 수행한다.

3.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 및 정리

- 북한 헌법에 대한 연구는 개별 헌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며
- 북한의 정치·사회의 변화를 함께 고찰한 연구는 미진함
- 본 연구는 역사적 시각에서 북한 헌법사를 고찰함
- 북한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존재
- 이는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외재적 시각
- 본 연구는 북한의 시각에서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접근함
- 북한사회의 변화,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성립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 조선노동당의 정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향후 북한체제의 변혁 등에 대비한 기초연구임

주요 참고문헌

조재현(2014), 1948년 북한제정헌법의 초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2

박선영(20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4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2016), 『북한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2020), 『북한이해』

김택현(1973. 4), 북한노동당 강령 및 규약해설, 『북한』 16

황병덕(2011), 2009년 헌법개정에 나타난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김진욱(2002),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로동당규약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

사학위논문

김판수(2004), 북한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장명봉(1990), 북한헌법 40년과 그 동향-북한에서의 이론전개를 중심으로-, 『북한법률행정논총』 8

장명봉(2010), 분단 65년-북한헌법의 변화와 지속, 『북한법연구』 13

김동한(1988), 북한법제 40년, 『고봉논총』 3

김도균(2005),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法治論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6-1

류지성·정상우·國分典子·三村光弘(2017), 『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 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김동춘 외, 안인경·이세현 옮김,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2.

찰스 암스트롱/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 탄생』, 서해문집, 2006.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刑事法制』, 東京: 社會評論社, 1988.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法と司法制度』, 東京: 日本評論社, 1985.

金圭昇, 『日本の朝鮮侵略と法制史』, 東京: 社會評論社, 1991

金圭昇, 『南・北朝鮮の 法制定史』, 東京: 社會評論社, 1990

金圭昇, 『日本の植民地法制の研究: 在日朝鮮人の人権問題の歴史的構造』, 東京: 社會評論社, 1987

3) 정향진 (서울대 인류학과)

선전선동을 통해 보는 북한체제의 문화심리적 토대와 변화의 징후

1) 영문저서의 개요를 잡고 서론을 완성함(서론 원고 별첨).

2) 주체의 종교성과 관련하여 11월 30일자로 국제학술지 American Religion 의 온라인 부록에 짧은 논문을 게재함(논문 원고 별첨).

Jung, Hyang Jin. 2020. "Family Metaphors in Religion: Cas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Religion (Supplement I, Askew Series). <https://american-religion.org/askew>

3) 영문저서 연구내용:

주체형 인간 및 “사회주의 대가정”의 형성에 있어서 문화심리를 활용한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집단주의 생활양식 그리고 신체규

을적 토대로서 주체 의례에 동시에 주목하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장함.

기존 북한 연구의 흐름에서 이 연구는 가족국가 논제를 계승한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가 주로 지도자 일가의 권력 계승(가산제 국가) 그리고 지도자와 주민 간 관계에 대한 정치적 수사(아버지 지도자- 인민 자녀)에 근거했다면 이 연구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것을 사회적 실재로서 구축해내는 문화적 논리와 신체의례 규율, 그리고 문화심리적 역동을 살펴본다.

북한 주민들의 행위적 정향에서 나타나는 “친밀한 사회성(intimate sociability)”이 체제의 정치적 성격과 사회적 조직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친밀한 사회성은 남한 사회에서 정감이나 감정성, 공동체성 등으로 인식되는 행위 정향을 가리키는 바, 북한의 경우 체제의 선전선동과 집단주의 생활양식으로 인해 특징하게 고양되어 사회주의 대가정의 정서적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인 근간은 사회성의 문화모델(마을모델과 가족모델), 토착심리학적 범주(정, 마음), 정신역동의 문화심리(모-자녀 애착), 동아시아 공-사 개념, 그리고 의례화와 신체 규율을 둘러싼 논의들이다. 이론적인 논의들을 탈북이주민 및 북한주민의 행위 정향에 대한 관찰 및 면담자료, 선전선동 문헌, 그리고 집단주의 조직생활에 대한 면담자료 등과 연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 국가사회(게제르샤프트)를 “정(情)의 게마인샤프트”로 건설하고자 하는 반(反)근대적 열망의 근대적 기획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 연구의 기본 전제에서 주체는 단순히 북한의 체제를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심리의 구조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근 이후 시장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상당하다면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내면에서 주체와 후기주체의 관계 양상에 대한 것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보다 항구적인 차원과 현실적응적인 차원으로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한다.

4) 온라인 논문:

유대기독교 전통의 종교를 비롯하여 종교적 맥락에서 초월적 존재의 성격, 초월적 존재와 인간의 관계, 신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가족비유가 흔히 사용된다. 한반도의 예시로 주체(교)와 통일교를 비교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와 통일교 둘 다 기독교의 가족비유와 유교의 가족주의 이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신도와 종교지도자(초월적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4) 채수홍 (서울대 인류학과)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보고서의 연구주제인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개혁개방의 역사와 각 시기별 노동시장의 변화양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분석하여 북한의 사례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요인,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의 실행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개혁개방이 어떤 사회경제적 성과를 낳았는지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이주노동의 패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토대를 두고 베트남 노동자의 개혁개방과 노동시장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논해 본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분화, 노동자 가구의 생활여건, 당-정부와 노동조합의 대응,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적 저항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며 분석한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내용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시장을 연구할 때 어떤 함의를 가지는 것이며 어떤 과제에 대한 탐구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을 탐색한 결과로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체제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종의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s)'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보호자(patron)로서 국가가 최소한 인민의 생계를 지켜주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광범위한 저항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베트남 인민의 개혁개방요구는 체제에 대한 정치적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근과 소비재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외침이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민의 생계수준을 계층별로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둘째, 시장경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흔들 것이라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기대는 베트남의 사례와 맞지 않는다. 베트남은 역설적으로 경제의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이 아닌 개혁개방의 성공적 실행으로 사회주의 정권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북한의 개방정책 그리고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이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고 나아가 체제를 전환시킬

것이라는 가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이념과 문화, 동의, 헤게모니 등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북한정권의 우려도, 오랜 교육과 일상을 통해 북한인민이 내면화한 지배문화를 무시하고 개혁개방과 통일을 동일시하는 외부의 시각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혁개방 직전과 직후 베트남 정부가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혁개방 이전에도 국영기업보다 비공식 사영부문이 생산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컸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사영부문이 노동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을 논의할 때도 국영부문과 사영부문 또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비중과 성격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타당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개혁개방이 북한의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베트남의 사례는 노동시장의 자유와 유연성(flexibility)을 좌우하는 데 거주이전의 자유와 이주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주와 거주 자유를 폭넓게 허용했으며, 그 결과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사실상 전면적인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제어할 수단을 잃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거주와 이주의 법적, 정치적 규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따라 노동시장의 특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거주 및 노동력 배분을 강력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이는 장마당처럼 아래로부터 형성된 시장과는 달리 개성공단처럼 노동력이 국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형태의 산업화를 예견하게 한다(Kim, 2019; Lee, 2015). 이런 추정은 향후 북한사회의 거주관련 법과 이주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베트남의 사례는 인구의 동학, 특히 출산율과 고령화가 향후 외국자본을 유인하고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가진 노동시장 덕택에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금상승과 고령화되어가는 노동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의 중요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노동시장에 대한 인구학적 변화추이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섯째,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사회의 문화적 욕구가 어느 사회 못지않게 노동시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빈곤을 벗어나고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에 한계가 보일 때 가족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욕구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에는 일자리를 찾아 저임금을 마다하지 않고 농촌에서 도시로, 북부와 중부에서 남부로 이주가 일어났다. 하지만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과 가까이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력이 많아지고 기존의 산업지대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사회가 경제적 욕망보다 이념과 문화적 관념을 강조해 온 역사를 고려할 때 일자리와 가족 및 공동체의 재생산이 어떻게 연계되어 노동시장의 특성을 만들어 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베트남의 사례는 외자의존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개방의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초기의 의도와 달리 개혁개방정책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민의 욕구와 동의가 커져감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도입과 세계경제로의 통합으로 나간 경우이다. 그 결과,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부의 시장개방 요구를 점차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전면적 개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경제가 일정정도의 궤도에 올라설 경우 외자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국가와 노동조합 혹은 다른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산당, 정부, 노동조합, 여타 대중조직이 조합주의(corporatism)에 기반을 두고 얽혀 있어 관리 및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지배적 생산양식이 되면서 자본(경영)과 노동의 대립을 중재할 여지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동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제도와 조직의 작동방식과 중재능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베트남의 사례는 시장경제의 정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분화가 심화되면 노동시장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베트남처럼 북한에서도 개혁개방 초기에는 빈곤과 소비재 기근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하겠지만 차츰부의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축적될 수 있다. 노동자가 빈곤에서 벗어나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구재생산이 힘들어지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가 당 간부와 같은 소수 특권층에 집중되면 이념교육과 헤게모니에 기초한 정치통제의 가능성 대신 오히려 물리력을 활용한 강압적인 통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 인민의 불만과 국가의 강압적 통제가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남아 개혁개방정책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은 향후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북한사회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베트남의 산업화와 노동자의 저항’이라는 논문(‘문화인류학자가 들려주는 동남아시아 이야기’, 2020, 놀민출판사)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본격적인 베트남과 북한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관련분야 기여도

○ 통일평화연구 전문가의 확충

- 본 사업은 통일평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부족한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에게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통일평화연구전문가를 확충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업은 참여교수가 북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원래 목표는 향후 1년 동안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하거나 저서를 출간하는 것이었는데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교수들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의 사회문화 연구 심화

- 북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정치경제의 양적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에 대한 질적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본 사업은 북한의 현실을 문화적 규칙, 규범, 실천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음.
- 본 사업의 참여교수(채수홍, 김재석)는 베트남, 중국 등 포스트-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북한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탈북자와의 여섯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자료를 모아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음.
-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본 사업의 참여교수들은 북한 사회와 문화를 현장중심적인 자료를 통해 해석하려는 진일보된 성과를 거두었음. 그 결과 단편적인 북한 사회의 문화적 이해를 넘어서도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사회의 문화적 현실에 토대를 둔 현실적 정책방안 도출
 - 본 사업의 장기적 목표의 하나는 북한사람들의 문화적 규범, 관념, 규칙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임.
 - 본 사업은 북한사람들의 문화적 경험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북한주민의 욕구와 경험에 맞는 정책을 염두에 둔 논문과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자부함.

- 통일평화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위한 다학제 연구의 시도
 - 본 사업은 초기부터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이번 년도에도 법학자와 인류학자가 협업하여 통일평화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음.
 -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북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존 평화통일 연구가 가진 편향성과 분절성을 극복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4. 예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이 사업은 단기적인 목표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통일과 평화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기획되었음. 이러한 의도는 현재 한국의 통일평화연구자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업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과정도 적절하였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회과학대학 중심으로 연구진이 구성된 점이 아쉽지만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학자들이 통일평화와 관련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든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사업의 효율성

- 사업의 목표가 장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참여교수의 통일평화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배가되었으며, 논문을 비롯한 가시적 성과(4인이 4개의 관련 논문 집필)도 산출되었음.
- 향후 참여교수가 진행할 프로젝트나 저서집필이 이루어지면 본 사업의 성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견됨.
- 이러한 점만 두고 볼 때도, 타 분야의 전문학자의 평화통일학에 대한 관심 유도라는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함.

○ 사업의 영향력

- 본 사업의 참여교수가 북한의 사회문화를 직접 다루거나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실행함으로써 평화통일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직접 기여하였음.
- 이밖에도 참여교수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강의와 강연을 실행하면서 북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이 사업의 간접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통일평화 연구자 인큐베이팅 사업은 다른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음. 이것이 가능하면 향후 통일평화학 분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생각함.
- 이 사업은 향후 참여교수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문화를 다른 사례와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런 성과를 성취한다면 문자 그대로 인큐베이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것임.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미흡한 점

-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통일평화에 관한 연구에 입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는 잘 기획된 것이지만, 연구프로젝트로 발전하기에는 물질적, 제도적 지원이 미약하다고 생각함.
- 인큐베이팅 사업을 분야별로 신설하면 좋을 듯함. 현재는 초기에는 너무 다양한 관심 때문에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반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진만 열성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문제가 발견되었음.

- 보완할 점
 - 향후 여러 분야에서 몇 개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프로젝트에 가까운 사업에는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에서 질적 연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관련 제언
 - 향후 참여교수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신청해볼 계획임. 다만 이번에 참여한 교수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 평화통일학에 공헌할 인큐베이팅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겠음.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김재석. 2021. “From Coercion to Cooperation: Urban Governance and Evolving Modes of Control in a Beijing Village” Critique of Anthropology. (2021년 6월 출판예정)

□ 성과 자율 지표

- 정향진. 2020.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149-178
- 채수홍. 2020. “제3장 베트남의 산업화와 노동자의 저항” 문화인류학자가 들려주는 동남아시아 이야기. 놀민출판사. p.139-191.
- 정향진. (2020.11.30.) “Family Metaphors in Religion: Cas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Religion.
<https://american-religion.org/askewjung>
- 김재석. 2021. “From Coercion to Cooperation: Urban Governance

and Evolving Modes of Control in a Beijing Village” Critique of Anthropology. (2021년 6월 출판예정)

- 2020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0.11.26.)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0.10.20.) 탈북민 김현미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0.11.10.) 탈북민 엄덕봉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0.11.24.) 탈북민 엄덕봉 (추가적으로 진행)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1.01.06.) 탈북민 김주성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1.01.14.) 탈북민 류현우
- 탈북민초청간담회. (2021.01.22.) 탈북민 전경주